

일반
논문

1947~1949년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민간인 학살

김상숙 _단국대학교

논문요약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전개된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첫째,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 항쟁까지의 시기(1945.8~1946.12), 둘째,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투쟁과 1948년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투쟁을 벌이던 시기(1947.1~1948.8), 셋째, 정부 수립 후 비합법 무장투쟁이 중심이 되던 시기(1948.8~1950.6)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46년 10월 항쟁 후 노동운동 부문은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약화되었으나 학생운동과 도시 인근의 농민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48년에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하여 2·7 구국투쟁과 5·10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분단체제로 치닫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했다. 정부 수립 후 여순항쟁의 영향으로 대구 6연대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경북 일대 산지에서 유격대의 무장투쟁이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중운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비합법 세포들이 유격대의 무장투쟁을 보조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농촌 지역 유격대의 구성원은 입산하여 ‘산화(山化)한 유격대’와 자신의 연고지에 머물면서 입산자와 지역민 사이에 연결 고리 역할을 하던

‘들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9년, 군정은 유격대와 대중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들군’의 역할을 하던 마을 주민들을 다수 학살했다. ‘들군’들이 자주적 조직단위가 되지 못하고 유격대의 동원단위로 활동하다가 학살되면서 유격대는 점차 고립되었고,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정권의 물리력에 의해 궤멸하였다.

이처럼 1946년 10월 항쟁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진행된 사회운동 양상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는 미군정 및 보수 세력과의 대결이 전면화되고 전선이 분명해지면서 주요 핵심 세력은 탄압당했지만,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서는 대중운동이 더 성장한 곳도 있었다.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대중운동이 정부 수립 후 퇴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엄청난 물리적 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을 자주적 단위로 조직하지 못한 남로당과 유격대 무장투쟁의 활동방식의 문제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주요어: 대구. 1946년 10월 항쟁. 남로당. 6연대 사건. 유격대. 민간인 학살.

1. 들어가며

해방 직후에서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는 기존 한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구조를 상당 부분 재편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만들어졌던 시기이다. 특히 한국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아래에서 외세에 의해 초기 국가기구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구처럼 ‘시민사회 → 정치사회 → 국가’의 경로가 아니라, ‘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의 순서를 밟으면서 근대국가가 형성되었고(박찬표 2007), 사회로부터 국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주조하는 과정을 거쳤다(박명립 1995). 이 과정은 초기 국가기구의 학살과 통제로 해방 직후 양성했던 지방 단위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퇴조하고, 시민사회가 아래로부터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좌절되었던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지방사를 연구할 때에는 사회운동사와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정부 수립 전후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과 민간인학살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전개된 남한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시기별로는 첫째, 해방 직후 여러 정당조직과 대중조직이 건설되고 대중투쟁이 일어나 1946년 10월 항쟁으로 이어지던 시기, 둘째, 1946년 말 남조선노동당이 결성되고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 속개 투쟁과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이하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 셋째, 남북한의 분단 정부 수립 후 여순항쟁이 일어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시기, 즉, 1946년 10월 항쟁 후 대구지역 진보적 사회운동의 변화 양상과 이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공간적으로는 대구를 중심으로 보되, 일제강점기부터 대구시에 편입되어 있던 달성군과 대구 인근 군 지역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다.

해방 전후 대구·경북지역 사회운동사 연구는 1946년 10월 항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시기적으로는 1945년 8월에서 1946년 10월까지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정해구 1988; 정영진 1990; 심지연 1991; 안소영 1993; 허은 1994; 김일수 2001; 허중 2004; 김상숙 2011a 등). 미군정기인 1948년 상

반기까지의 대구 좌파 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허종의 연구와 우파 운동을 다룬 이영도의 연구가 있다. 특히 허종은 이 시기 운동을 국대안(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운동과 3·22 총파업, 미소공동위원회 성공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운동,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운동으로 나뉘서 살펴보고 있다(허종 2005; 이영도 2005). 정부 수립기를 다룬 연구는 경북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상숙의 연구가 있다. 김상숙은 경북 영천을 사례로, 10월 항쟁 후 이중권력 형성, 빨치산과 마을 청년들의 일상생활, 그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김상숙 2014).

이 글은 이와 같은 학계의 선행 연구자료를 참고하되, 신문기사와 정부 보고서 등 여러 문서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대중 조직 활동가, 마을 주민, 경찰 등 다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구술조사는 2010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진행했다. 구술자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구술증언 기록을 남긴 적이 있는 강창덕,¹⁾ 유병화,²⁾ 이일재³⁾ 외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구술 자료 인용문의

-
- 1) 강창덕(1927년생)은 1945년 해방 직후 경산군 하양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 활동을 했으며 1946년 10월에는 대구상업학교 학생으로서 10월 항쟁 현장에 있었다. 1947년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을 하다 11월에 포고령 위반으로 구류와 벌금형을 받고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 뒤 수십 년간 진보정당운동과 통일운동에 종사해왔다.
 - 2) 유병화(1929년생)는 1945년 대구역 기관구 철도노동자로 입사해 해방 직후 철도노조 결성에 참여했으며, 철도노조 조직부장으로 1946년 10월 항쟁 현장에 있었다.

출처는 필자가 직접 구술조사한 자료와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만 따로 명기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사건의 명칭을 ‘10월 항쟁’ 또는 ‘1946년 10월 항쟁’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그리고 당시 사회운동 세력의 성향을 구분할 때 ‘좌파(좌익)’와 ‘우파(우익)’라는 용어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했다. ‘좌파(좌익)’와 ‘우파(우익)’라는 용어는 지배권력과 다양한 세력의 모순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문맥상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경우나 인용한 문헌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그대로 표기했다.

2. 1947~1948년 8월까지의 사회운동

1) 정당조직의 활동

1947년에서 1948년 8월까지 대구지역 정당조직의 활동을 살펴보려

-
- 1949년 6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50년 9월에 출소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국가기관의 사찰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6년 3월에 작고했다.
- 3) 이일재(1923년생)는 1946년 화학노조 대구시지부 서기로 10월 항쟁에 참가했다. 그 뒤 경북 영천과 문경에서 남로당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 구속되었다. 1949년 8월에는 팔공산 빨치산부대로 입산했다가 1950년 4월에 비슬산에서 군경에게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그는 그 뒤 줄곧 사회운동을 하다가 2012년에 작고했다.

면, 해방 직후 지역의 정당 활동 특징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대구지역에는 다양한 정당과 단체가 결성되었다. 진보계열의 정당은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조선인민당(이하 인민당), 조선신민당, 조선민족혁명당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조공과 인민당의 세력이 강했다. 특히 조공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여러 정당 중 가장 먼저 결성되어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6년경의 조공 대구시당은 동서남북 4개 지구당과 직장 세포책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다(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52-53; 허종 2004, 153; 이일재 1990, 369). 조공은 운동방식 면에서는 다른 정당과 달리 대중정당이 아닌 비공개 전위정당, 즉 군사주의적 규율과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비밀결사 중심의 운동방식을 고수했다. 그리고 각 부문 대중조직에 비공개 세포조직을 만들고 활동가를 파견하는 한편, 진보진영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의 결집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통해 공개적 대중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방식으로 활동했던 이유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전위당 이론의 영향도 있었고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측면도 있었지만, 해방 직후 사회주의 계열 활동가들이 일제강점기 비밀결사 형태의 운동에 익숙했고 공개된 공간의 합법적인 대중운동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조공은 1946년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의 탄압이 강화되자 신전술로 대응하는 한편,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정당인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을 결성했다. 대구에서도 삼당합당이 결의되어 1946년 9월 27일 남로당 대구시당을 결성했다(영남일보사 1947, 98). 그러나 10월 항쟁의 여파로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1947년 2월에 활

동이 재개되었고, 경북도당은 1947년 3월 16일에야 공식 출범했다(정영진 1990, 428). 남로당은 진보세력의 단결을 지향하며 결성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남로당 결성 과정에 진보세력이 또다시 분열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는 여운형을 지지하는 인민당 일부 세력이 나중에 따로 근로인민당을 창당하기는 했으나, 조공 안에 분파 갈등이 없었고 인민당 대구지부도 조공 프랙션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신민당도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삼당합당이 큰 갈등 없이 진행되었다(허중 2005, 143-144). 그러나 조공에서 남로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핵심 활동가층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항쟁 후에 김일식, 윤장혁 등 핵심 활동가들은 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수배되면서 활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피해를 덜 입은 원로 활동가들이 나서서 조직을 정비하고, 해방 이후 새롭게 충원된 더 젊은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핵심 실무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 인근의 경북 농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경북 농촌 지역에서는 해방 직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항일운동가와 지역유지 등 명망가들이 각 지역의 지도부를 구성했으나 10월 항쟁을 계기로 대부분 활동 일선에서 물러나고, 해방 이후 대중조직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대들이 지역운동의 중심이 되었다(김상숙 2011a, 180; 김상숙 2014, 135). 그리고 이것은 1947년 이후의 지역 사회운동이 그 이전의 운동보다 더 급진화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남로당은 과거의 조공과 달리, 동유럽과 북한의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 아닌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이완범 2008, 31-32)⁴⁾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결성한 정당이다. 남로당은 결당 이후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면서 당원의 입당 조건을 낮춤으로써 당조직을 대중정당으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제로 대중의 지지도 상당히 높았다. 1947년 6월 군정 공보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남로당이 1위, 근로인민당이 2위를 차지했다(남선경제신문 1947/06/21).

그러나 미군정의 탄압이 노골화되면서 애초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합법적 대중운동을 펼쳐나가기 힘들었다. 또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을 주장하면서 광범위한 계층계급의 통일전선운동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계층계급을 포용하지 못하고 노동자 등 직장세포 조직화에 치중했다. 특히 대구는 당시 지역 인구 중 노동자와 학생보다는 빈민의 비중이 훨씬 컸으나 그들을 조직의 중심으로 흡수하지 못했다.⁵⁾ 또한,

4) 박헌영은 1946년 4월 20일 민전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내외 정세 보고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를 (1) 부르주아민주주의 (2) 인민민주주의 (3)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나누면서 조선은 인민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파시즘에서 해방된 동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새 형태인 ‘인민적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있으며, 일체로부터 해방된 조선에서도 이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인민보 1946/04/26; 이완범 2008, 31에서 재인용).

5) 해방 후 귀환 이재민이 급증하면서 1944년 20만 7,000명이던 대구의 인구는 1947년 11월에는 29만 3,000명으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c, 53). 1947년 5월 기준으로 대구의 귀향이재민 수는 8만 2,241명이었고, 구호대상자가 4만 125명이었다(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b, 26). 그리고 1947년 대구 직업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대구부(府) 내 전체 취업자는 6만 8,000명으로 당시

조직방식도 대중조직을 당조직의 외곽이나 하부단위로 보던 조공의 방식을 고수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할 경우, 대중조직은 당조직에 지도받는 단위, 당 활동의 동원 단위 역할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대중조직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선조직인 민전도 대중조직의 실질적 지도부가 되지 못하고 행사 개최를 위한 한시적 투쟁기구 또는 당조직의 외곽 역할 이상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투쟁과 대중조직의 활동

1947년에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 전까지는 미소공위 속개 투쟁과 남한만의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이다. 1947년에는 연초에 학생들의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 반대운동과 노동자들의 3·22총파업이 일어난 뒤에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는 투쟁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무산된 후에 유엔은 1947년 11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시행과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 파견을 결정했다. 소련과 북한이 이 결정을 거부하자, 2월에는 유엔 소총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남한만의 총선거 안을 결정했다. 이에 1948년

대구 전체 인구의 23% 정도였다. 취업자 중에는 일고 노동자 24%, 상업 21%, 공업 18%, 농업 13%, 공무원 11%로 공업 노동자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반면 일고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고 실업률이 10%대에 달했다(조선은행 조사부 1949, 22-23;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c, 173).

〈표 1〉 1947년 ~ 1948년 8월까지 대구지역의 주요 투쟁

<p>1947.2.12~3.4 (국대안 반대운동)</p>	<p>▶ 국대안⁶⁾ 법령이 공포되자 1946년 11월 경상북도 학무과장이 경북 종합대학 설립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함. 이에 맞서 1947년 2월 중순 대구지역 대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은 '국대안 반대 대구 학생 공동투쟁위원회'와 '국대안 반대 대구시 중학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맹휴에 들어감. 학생 1만여 명 맹휴 참가. 이 운동이 마무리된 후에도 맹휴 주도 학생 처벌 반대 문제로 4월 초까지 맹휴를 계속함(허중 2005, 157-158).</p>
<p>1947.3.1</p>	<p>▶ 민전이 주최한 삼일절 기념행사에 시민 2만여 명 운집(영남일보 1947/03/03). 이 행사는 1946년 10월 항쟁 이후의 탄압에도 남로당과 민전이 견제함을 알린 범시민적 행사였음.</p>
<p>1947.3.22</p>	<p>▶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도 24시간 시한부 총파업. 대구 남조선전기회사, 수도, 대구역 철도 기관구, 대구우편국, 일부 방적공장 등에서 파업이 일어남. 학생들 맹휴(조선일보 1947/03/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29).</p>
<p>1947.5</p>	<p>▶ 경북민전 주도로 '미소공위 속개 촉하 경북도준비위원회'를 결성. 5월 26일 시민대회를 열고자 했으나 미군정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민전 활동을 탄압함(영남일보 1947/05/08, 1947/05/21).</p>
<p>1947.7.27</p>	<p>▶ 경북민전 주최로 달성공원에서 '미소공위 재개 촉하 임시정부 수립 촉진 대구시 인민대회' 개최. 시민 수만 명 참가(서울신문 1947/07/31).</p>
<p>1948.2.7~2.10 (2·7 구국투쟁)</p>	<p>▶ 노동 부문은 철도역 보선구 전원 250명을 선두로 파업. 변전소, 군사제사 메리야스, 동방건직, 남선제철 금속공장 등이 파업. 민성일보를 제외한 전 신문이 파업으로 휴간. 달성 광산 광부 7,800명과 가족 2,000명이 시위. 각급 학교 맹휴. 시가행진은 7일에 30개소, 8일과 9일에 각 15개소의 총인원 5만 5,000명이 참가, 뼈라 10만 매가 살포됨(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33-334).</p>
<p>1948.3.22, (3·22 총파업 1주년 투쟁)</p>	<p>▶ 대구 시내 곳곳에서 단독선거 반대 시위를 전개. 대구중공업과 대구방직 등의 노동자들은 단독선거 반대·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반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함(영남일보 1948/03/23).</p>
<p>1948.4월~6월 (5·10 단독선거 저지와 단독정부 반대투쟁)</p>	<p>▶ 선거인 등록이 시작된 3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구에서 35건의 선거사무소 파괴, 개인 습격 등이 일어남(영남일보 1948/05/06). ▶ 5월 1일~5월 말 사이 산발적 시위. 각급 학교 학생과 교원 맹휴. ▶ 5월 8일 전평 '조선 단선단정 반대투쟁 총파업위원회' 주도 총파업에 전매국, 은행, 대구방직, 남선전기 노동자들이 참여해 단독선거 반대, 미소 양국 동시 철수, 남북협상 지지 등을 주장함(영남일보 1948/05/09). 대구부청 식량사무소 토지행정처·법원·검찰청·우편국·전매국 등 각처에 단선단정 반대 뼈라가 살포되고 대구방직공장에는 파업 중 경찰에게 1명이 사살됨. 신천동 변전소에는 변압기가 파괴됨. 민성일보사 공장에 수류탄 폭발(동아일보 1948/05/12). ▶ 경북도선거위원회가 밝힌 대구의 5·10 선거 기권율은 22%(영남일보 1948/05/20).</p>

	<p>달성군과 칠곡군 등 농촌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선거 거부 활동을 함.) ▶ 6월 8일, 대구 계산동, 봉산동, 대봉동, 덕산동 등 시내 중심가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남(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a, 1206).</p>
--	--------------------------------------------------------------------------------------------------------------------------------------------

2월에는 유엔조선임시위원단 파견을 반대하여 2·7 구국투쟁이 일어났고 뒤이어 5·10 선거를 반대하는 단선단정 반대투쟁 전개되었다. 이 시기 대구지역의 주요 투쟁 상황은 <표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 시기 부문별 대중조직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1946년 7월 발표된 국대안은 한 지역의 여러 대학과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국립종합대학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정책이 일제 잔재를 지속하고 학문과 연구의 자유,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했다(최혜월 1988).
- 7) 진실화해위 보고서에는 대구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5·10선거 반대 활동을 벌이다 학살된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다. 1948년 5월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청년 10여 명은 굴골산 중턱에 있는 농가에 모여 5·10 선거를 반대하는 모임을 했다. 5월 11일,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고 농민들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수성구 상동에도 토벌대가 청년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있었다(진실화해위 2010b, 280, 291). 그 외에도 대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 일어난 단선 반대운동의 양상을 알 수 있다.

“5·10선거 할 때 가창면민 전체가 반대했어요. 어느 동네 막론하고 선거 안 할라고 모두 산으로 다 갔잖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앞산 감태봉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농촌에서 일만 하고 살았지 운동도 모르고 사상도 몰랐는데, 5·10선거를 강압적으로 하니까 마을 지식층들이 앞장서서 반대했고 우리도 따라서 반대했지”(달성군 서○○ 구술).

“5월 10일 선거날 선거 반대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갔어. 남로당 사람들이 선거하지 말라고 해서 10대인 우리도 따라갔고, 아(아이)들만 남고 동네를

(1) 노동 부문

노동운동은 해방 직후 대구지역에서 조공이 가장 조직화에 주력하여 1946년 9월 총파업을 조직적으로 펼쳤으나 그 후 탄압의 충격을 크게 받았던 부문이다. 해방 직후부터 조직되었던 대구지역의 노조들은 1945년 12월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대구지방평의회(대구지평)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미군정의 탄압이 심해지자 전평은 1947년 2월 제2차 전국대회를 열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대구지평은 이 대회의 방침에 따라 경북도평의회(경북도평)를 결성하고, 대구지평은 대구시평의회로 전환했다(허종 2005, 152-153). 이후 경북도평은 전평의 방침에 따라 1947년 3·22 총파업, 1948년 2·7 총파업, 1948년 5·8 총파업, 1948년 11·30 총파업을 벌였으나, 미군정의 탄압으로 1946년 9월 총파업만큼 위력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다.

특히 1946년 9월 총파업의 주력이었던 대구철도노조는 혹심한 탄압을 받아 조직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대구철도노조는 1945년 9월 말에서 10월 초경 조공 대구시당의 당원들이 파견되어 결성했으며(위원장 김희준), 결성 초기에는 기관구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946년 10월 항쟁 직후 노조를 이끌던 활동가들이 대부분 해고되거나 체포되어 1947년에 3·22 총파업이 진행될 무렵에는 위원장조차 공석이었다. 1947년 중반부터는 정재익 등 보선구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1948년 2·7 총파업을 벌였다. 1948년 후반에는 정갑동(대구 수화물계 역

비워버렸어”(칠곡군 이○○ 구술).

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 무렵에는 사실상 철도노조의 활동이 중지되고 대한노총 철도연맹 대구지부로 주도권이 넘어갔다(유병화 구술). 대구에는 철도노조 외에도 남선전기 대구지점과 대구 전매국 등에서 노조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나 이 노조들도 대부분 1948년 후반에는 대중투쟁을 중지하고 소수의 비합법 세포조직만 남게 되었다. 전매국 노동자들은 1949년 달성 광산에서 학살되기도 했다(달성군 전○○ 구술).

(2) 학생 부문

1946년 10월 항쟁 이후 가장 성장한 부문이다. 10월 항쟁 이전 대구 지역의 학생들은 각 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조공 학생부(학생부책: 대구의대 최무학)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망을 통해 각종 정치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10월 항쟁 시에는 연합시위를 벌이며 대구경찰서를 점거하며 항쟁의 주력이 되었다.

1947년으로 접어들어 2월에 국대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은 봄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이하 민주학련) 산하에서 지역연합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민주학련은 서울에서는 3·22 총파업 직전인 3월 21일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6월 17일에 결성식을 올렸고, 전국조직은 7월 7일에 결성되었다(자유신문 1947/07/09). 대구민주학련 결성 일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주학련은 공개적인 대중조직연합체라기보다는 남로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에서 파견한 ‘오르그(조직가)’가 지도하는 비공개 정치대중조직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거의 모든 중학교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 대중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으며(강창덕 구술),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1947년 미소공위 속개투쟁과 1948년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펼쳐 나갔다.

(3) 청년 부문

청년운동 부문에는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와 대구청년동맹 등 다양한 대중조직과 조공 산하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하 공청)이 함께 활동했다. 1946년 4월부터는 이를 통합한 조선민주청년동맹 대구시위원회(이하 대구민청)를 결성해 이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6년 10월 항쟁 시기에 선봉대 역할을 했던 대구민청은 항쟁 후 주요 인물이 체포되면서 탄압을 받았고 1947년 5월 미군정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산되었다. 이에 민청조직을 기반으로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이 재조직되었다. 1947년 6월 5일 전국 민애청 조직이 결성되었고(류상영 1989, 68),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경북도위원회(위원장 박기섭)가 결성되었다. 민애청 대구시위원회도 이 무렵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허종 2005, 154).

민애청은 남로당의 외곽단체로서 1947년과 1948년에도 각종 투쟁에 진보세력의 전위대로 활동했다. 1947년 8월 미군정이 좌익 총검거령을 내린 뒤 합법적 활동이 완전히 봉쇄되고 남로당의 전술이 무장투쟁 중심으로 전환한 뒤에는 상당수가 입산하여 인근 지역에서 전개되는 유격투쟁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류상영 1989, 68).

당시 서울지역에서는 조공이나 남로당 외곽 청년단체들은 구성원 중

에 노동자와 농민층보다 가두층(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유직업자나 무직자)이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가두층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류상영 1989, 66-68). 그러나 대구에서도 1947년에 민주학련이 결성되면서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청년단체에는 가두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4) 빈민과 농민 부문

해방 후 대구에는 귀환 이재민이 대거 들어와 정착하면서 도시 인구 중 빈민의 비중이 컸다. 대구지역 빈민들은 1946년 초부터 8월까지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자연 발생적인 시위를 여러 차례 했으며(정해구 1988, 90-91), 1946년 10월 1일과 2일에는 노동자 파업과 학생 시위를 항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칠성동 인근 마을이나 남산학교 주위 마을, 덕산국민학교 뒤쪽 마을의 주민 중에는 시위참여자나 미군정 반대자가 많았다(유병화 구술). 그러나 당시 조공 조직과 정치적 대중조직들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빈민을 주축으로 한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

대구와 인접한 농촌인 달성군은 1945년 10월에 농민조합이 결성되었고 1946년 4월부터는 달성군 민전지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정해구 1988, 71). 여러 구술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보면, 1946년 10월 항쟁을 계기로 1947년 이후 대구 인근 농촌 지역의 대중운동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당시 남로당 활동가였던 이일재는, “대구·경북에서는 남로당에

서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자 한 달 만에 배가를 이루었다. 면장, 동장이 당원인 경우도 많았고 행정구역마다 세포 없는 곳이 없었다.”고 했는데(이일재 2009, 24), 대구 인근 농촌에 거주했던 다른 구술자들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⁸⁾ 대구 인근 농촌 지역의 마을 조직이 강화된 것은 주민들이 1946년 10월 항쟁 참여 후 정치의식이 각성되고, 군경의 강경한 진압에 반발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에 머물던 농촌 출신 청년 활동가들이 당국의 탄압 때문에 귀향하여 운동을 펼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마을의 친족공동체 관계의 영향으로 마

8) 달성군 서○○과 영천군의 김○○의 구술은 당시 대구 인근 농촌 지역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해방될 무렵 우리 마을에는 열아홉 살에서 스물두 살 사이의 청년이 20~30명 있었어요. 마을 출신인 대구사범학교 학생 두 사람이 국민학교에 2년 과정으로 보습과(간이학교)를 만들어 사상을 전파했지. 48년에 보습과 1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1회 졸업생은 20명도 채 안 되지만 전부 사상가였어요. 빨갱이 면책(면책임자)도 거기서 나왔어요. 보습과 졸업생들이 평소에는 개울가에 청년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빨갱이 일하고, 청년들은 좀 똑똑한 사람은 전부 거기 심부름을 했지. 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달성군 서○○ 구술).

“10·1 사건 때는 폭동만 났지 나서서 좌익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지. 10·1 사건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10·1 사건에 나섰던 사람들이 조직을 하더라. 우리도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며 보따리 차고 나서서 경찰 모르게 마을마다 숨어 다니며 누구에게든 선전하고 도장 찍고 남로당 가입하라고 야단이었지. ‘공산주의 사회 되면 토지를 무상 분배한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없이 평등 세상되니 살기 좋다.’라고 선전했는데, 이 말 듣고 어느 마을 없이 가구의 한 절반은 남로당에 가입했지”(영천 김○○ 구술).

을 유지나 지주가 남로당 활동을 하면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남로당에 가입하는 사례도 많았다(김상숙 2014, 122).

(5) 전선조직: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활동

여러 정당 사회단체가 모여 대구지역 정치활동을 주도했던 민전 대구 시위원회(대구민전)와 민전 경북도위원회(경북민전)도 1946년 10월 항쟁으로 간부의 대다수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피신하는 바람에 활동을 중지했다가 1947년 2월에야 활동을 재개했다(영남일보 1947/02/23). 10월 항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민당 계열의 인물이 다수 활동했으며, 1948년 8월 정부 수립 때까지 각종 기념행사와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미소공위 속개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대구민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았다. 당시 대구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는데, 민전이 주도하는 대회에 시민 수만 명씩 결집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대구민전은 행사 개최 기구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대중과 밀착되어 제주도 유일의 정부로 활동하며 민중 자치기구 역할을 하며 활동했던 제주도 인민위원회(김득중 2001, 321)와 비교된다.

〈그림 1〉은 민전 대구시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민주 임시정부 수립 촉성 시민대회’를 홍보하는 전단이다. 이 전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親美親蘇는 우리 民族의 道德, 反民主的 테로는 우리 民族의 自滅

美蘇 共同委員會 開催 : 朝鮮이 完全 自主獨立이 欲하면, 우리 政府가 速히 設야면, 國際的으로 孤立이 안니 欲하면, 이것이 하로 빨이 續開되어야 모다 解決될 것이다.

民主 臨時政府 樹立 : 三八度線이 없어지는 데도, 食糧 問題가 解決되는 데도, 南北統一의 民族文化를 建設하는 데도 이것이 速히 樹立되어야 모다 解決될 것이다

<그림 1> 민주주의민족전선 대구시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민주 임시정부 수립 축성 시민대회로!!"



자료: 김현식·정선태(2011, 387).

이 전단의 문구를 보면 당시 대구민전의 주요 투쟁 방향과 투쟁 관점

을 알 수 있다. 대구민전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민주정부 수립과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보면서 ‘친미친소’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남로당 중앙조직이 미군정 협조노선을 비판하고 반미 선전을 좀 더 강화했던 것 - 해방 직후와 달리 - 과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대중조직 구성원들의 활동 양상 특징

그러면 당시 대구지역의 전평, 민주학련, 민애청 등 대중조직의 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을까? 이에 대한 문서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단편적으로나마 몇몇 구술자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겠다.

민주학련의 활동상은, 대구상업학교 2부(야간부) 학생으로 1947년 3월부터 1947년 11월까지 학급자치회 회장을 맡아 민주학련 조직에서 활동했던 강창덕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강창덕에 의하면, 당시 대구상업학교에는 민주학련 조직이 학급마다 있었다. 2부의 경우 4개 학급 16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급 40명 중 10명 정도가 민주학련 활동을 했다. 활동은 비공개 점조직으로 했으며, 주로 대학생인 당 오르그(조직가)가 와서 교양사업을 하고 투쟁 과제를 지시했다. 1947년 대구상업학교 2학년과 3학년 조직의 오르그는 대구의과대학 학생들이 배치되어 활동했다. 당시 오르그를 담당한 대학생은 비합법 시기라 가명으로 활동했다. 또한, 전업 활동가로서 여러 조직을 함께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양사업을 할 때는 학생 7~8명이 비밀리에 모여 바깥에 망을 볼 보조를 세운 다음, 대학생 오르그가 마오의 「사회발전사」 등을 교재나 노트도 없이 구두로 강의했어. 내가 만난 대학생은 여러 조직을 지도하며 다니느라 그런지 행색이 매우 누추했어. 아이고, 내가 그때 마음 아팠던 게 의과대학 학생이 자기 일 하러 다니는데 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워서 벌벌 떨더라. 담배도 없어서 담배꽂초 쪽쪽 빨고, 참, 처절하다 할까(강창덕 구술).

당시의 주요 투쟁과제는 미소공위 속개투쟁이었다. 민주학련의 학생들은 ‘미소공동위원회 속개하라’는 구호를 담은 삐라를 밤에 전신주에 붙이거나 낮에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 뿌리는 일을 주로 했다. 강창덕은 대구중학교 운동회 날 삐라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운동회에 가서 구경꾼 속에 섞여 있다가 낮 열두 시 사이렌을 신호로 군중들에게 삐라를 뿌리고 온 적도 있었다.⁹⁾

9) 대구지역은 아니지만, 1947년 9월부터 1948년 가을까지 서울 A여중 학생회장으로 민주학련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한○○의 구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당시 이 학교에도 대학생 오르그가 연결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오르그가 정기적으로 와서 연락사항을 전해주면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했으며 정세 토론을 하거나 학습도 했다. 활동은 ‘삐라’를 ‘가리방’(등사기)으로 꺾어서 집회장에 뿌리는 일을 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는 것이 주였다. 당시 이 학교는 교사가 대부분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시위를 하면 전교 학생이 거의 다 참여했다. 한○○은 1948년 2·7 투쟁 때 동맹휴학을 주도한 뒤 경찰에 연행되어 구류를 살고, 학무국의 지시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 뒤 자신이 오르그가 되어 학교 주변 자취방을 다니며 후배들을 지도했다(한○○ 구술).

한편, 민애청의 활동상은 1947년에서 1948년 사이 민애청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시○○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성주 출신인 시○○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열여섯 살이 되던 1946년 가을에 대구에 와서 이듬해인 1947년에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민애청에 가입했다. 그는 민애청에 가입한 뒤에는 단체의 강령 규약과 마오의 '자유주의 배격 11훈' 등을 암기하는 학습을 했고, 1948년에는 단정 반대 연판장 서명 활동과 지하선거 활동 등을 했으며 전단을 뿌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이런 비합법 활동을 할 때는 전사와 같은 높은 결의를 갖고 활동해야 했다. 그러나 학생과 달리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가두 청소년'들은 전업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함께 감내해야 했다. 시○○은 당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활동가들의 생활상을 구술했다.

우리는 활동할 때 소모임 같은 것은 할 기회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지. 우리끼리 연락하든지 오르그가 오든지 했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못 했어. 만날 때는 구석방이나 술집에서도 만났지만, 대체로 앉을 자리 없이 길거리나 담 밑에서 만났지. 당시 생활이 비참했지. 지도자들은 이름도 있고 기억도 있지만, 우리 같은 전사들은 이름도 없고 기억도 없고 무덤도 없어.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최전선에서 몸으로 싸우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시○○ 구술).

당시 철도노조 활동가였던 유병화가 구술한 전평 소속 노조 활동가들의 일상 활동 양상도 강창덕과 시○○이 구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당시 주요 대중조직들은 남로당 활동가(오르그)의 지도나 지시를 받으며 비합법, 반공개 형태로 활동했으며, 대중조직 활동에도 군사주의적 규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민주학련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제적생이 전업 활동가로서 오르그 역할을 했으며, 민애청과 같은 가두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조직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은 대중의 지지도도 높고 구성원들의 활동 결의도 높았으나, 활동의 물리적인 조건은 몹시 어려웠다.

4) 당국의 탄압과 우익 조직의 정비

대구지역에서는 1946년 10월 항쟁 후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음에도 1948년 상반기까지 진보적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에 의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경찰은 1947년 5월 19일에는 민청 사무실을 습격해 민청을 해산시켰다(영남일보 1947/05/20). 8월 12일에는 8·15를 앞두고 좌파 정당과 사회단체 간부 400여 명을 체포했다(대구시보 1947/08/17). 11월 초에도 대구를 비롯한 경북 도내 전역에 걸쳐 좌익 간부 300여 명을 체포했다(대구시보 1947/11/07). 1948년 ‘2·7 구국투쟁’ 직후에는 대구·경북 도내에서 체포된 1,8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송치되었다(영남일보 1948/02/28). 5·10 선거를 전후한 4월 3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410건의 소요와 폭력 사건에

관련되어 좌파 인사 1,762명이 체포되었다(HQ. USAFIK. 1948/05/20; 허중 2005, 170). 6월에는 경북도청과 대구부청 직원 60여 명이 체포되었다(서울신문 1948/06/15).

우익조직 또한 확대 개편되었다. 대한독립촉성 대구시 국민회, 한민당 대구시지부도 조직을 확대하고 반공 우경화해갔다(이영도 2005, 133-134). 우익 청년조직과 학생조직의 테러도 빈번했다. 대구 인근의 농촌 지역에서도 지방 우익들은 1946년 10월 항쟁 전에는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으나, 10월 항쟁 진압을 계기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부를 정비하고 청년단을 강화하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권력이 되었다(김상숙 2014, 124). 특히 독촉은 이 과정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하면서 마을 단위까지 청년회를 정비해갔다. 1946년 10월 항쟁 후에는 서북청년단이 대구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폭력적인 반공주의가 퍼지기도 했다. 당시 서북청년단원인 이○○은 이미 1946년 10월 항쟁이 일어날 무렵에 서북청년단원 100명이 대구에 들어와 있었으며, 대구역 근처 적산가옥을 서북청년단 경상북도 본부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이○○ 구술). 서북청년단원들은 대구 외에도 영천, 경주 등 경북 각지에 들어가 총을 들고 다니며 민간인을 즉결처형하기도 하고 가옥 방화, 주민 재산 탈취, 성폭행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진실화해위 2009b, 813). 이에 우익과 좌익 단체의 대립도 격화되었고 좌우 간의 상호 테러 행위도 일어났다. 1947년에는 민주학련 간부인 대학생이 우익 쪽에 암살을 당한 뒤, 우익 쪽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총연맹 위원장 김일용(대구농과대학 학생)이 암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강창덕 구술).

3. 정부 수립 후 주요 활동

1) 대구 6연대 사건과 유격대 활동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에는 진보적 사회운동조직은 대부분 비합법 상태가 되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대중운동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1948년 11월 30일에는 소규모이나마 노동자들의 파업과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있었다. 이 파업은 11월 21일 국회에서 미군 주둔 결의안이 가결되자 이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대구에서는 파업 후 노동자와 학생 57명이 검거되었다(대구시보 1948/12/02). 당시 민애청 구성원이었던 시○○은 전매청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파업 현장에 갔다가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민애청 조직의 ‘동기’ 10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1호로 구속되었다고 하므로, 1948년 11·30 파업에는 민애청 조직원들도 상당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시○○ 구술).

1949년에는 대구 도심지에서 대중 정치 집회나 시위, 또는 파업이 일어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도시 인근 농촌에서 야산대와 유격대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대구와 대구 인근 지역의 야산대는 1946년 10월 항쟁 직후부터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천에서는 1946년 10월 15일경 대창면 신광동의 하곡수매 공판일에 ‘공비’ 수십 명이 출몰하여 농민을 선동하며 공출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기록이 있다(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 1987, 243). 또한, 칠곡에는 10월 항쟁을 주도했던 약목면 청년 6~7명이 항쟁 직후 유학산으로 입산해 활동했으며, 야산대원

중에 '홍포수'라는 인물이 유명했다고 한다(칠곡 이○○ 구술). 그 밖에도 많은 청년이 팔공산과 비슬산 등 대구 인근의 산에 입산했다. 야산대는 1948년 2·7투쟁 직후 대구사범 출신인 서역균 등 남로당 영천군당의 선전책, 청년책, 부조직책 등 7명이 영천 보현산으로 입산한 뒤, 이 '용감한 7인조'에 의해 경북 최초의 남로당 인민유격대로 조직되었다. 영천에서 조직된 유격대는 경북의 다른 군에 대원들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유격대를 조직했다(이일재 2009, 54). 당시 유격대는 전국을 5개의 유격지구로 나누고 그중 경주, 영주, 영일, 청도, 양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격지구를 영남유격지구라고 했으며, 영남유격지구는 영천 보현산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44-45).

유격대의 활동은 대구의 국방경비대 제6연대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대구 6연대 사건' 후 더 강화되었다. 제6연대는 해방 직후 하재팔을 중심으로 진보적 청년들이 모여 조직한 국군준비대 경상북도 사령부(이하 경북국군준비대)를 모태로 했다. 1946년 1월, 미군정이 국군준비대를 불법단체로 몰아 해산하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자 하재팔은 육사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를 수료하고 육군 참위(소위)가 된 뒤 경북국군준비대원들을 모아 대구에 설치된 제6연대 창설 멤버로 들어갔다. 제6연대는 연대장부터 인사 담당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진보 성향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매일신문 2006/07/24). 그러므로 여기에는 1946년 10월 항쟁과 1948년 2·7투쟁 후에 경찰에게 쫓기는 청년들이 다수 몰려들었다(영천 조○○ 구술).

'대구 6연대 사건'은 여순 항쟁 직후 세 차례 일어났다. 제1차는 1948

년 11월 2일, 당국이 제6연대에 숙군작업을 시작하자 곽종진 특무상사와 이정택 상사 등 군인 200여 명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대구 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다가 김천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북행했으며, 일부는 북행 도중에 지역 민중들과 합세해 몇몇 지서를 습격했다. 결국, 봉기를 일으킨 군인 대다수는 미군과 경찰, 다른 지역 경찰 지원부대 등에 체포되었고 주모자 6명은 처형되었다(국제신문 1948/11/06). 제2차 봉기는 1948년 12월 6일에 일어났다. 당시 여순 항쟁 진압 차 함양으로 파견되었던 6연대 일부 병력은 지휘관이 좌익 혐의로 구금되고 휘하 부대원들은 원대복귀 명령을 받았다. 이에 귀대하던 군인 40여 명이 대구 성당못 근처에서 무기와 탄환을 실은 차를 끌고 도주하면서 추격하던 다른 군인들과 교전을 벌였다(서울신문 1948/12/10). 제3차는 이듬해인 1949년 1월 30일 포항에 주둔하던 제6연대 제4중대의 좌익 사병 일부가 장교를 사살한 뒤 탈주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연대장이었던 최남근 부위와 김종석 정위는 총살되고 '반란 연대'가 된 제6연대는 1949년 4월에 해체되어 제22연대로 흡수되었다(매일신문 2006/07/24).

여수·순천에서는 제14연대 좌익계 군인들이 시작한 봉기에 남로당 지방당의 조직원들과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김득중 2001, 322). 그러나 대구 6연대의 봉기는 봉기한 군인과 지방조직이 결합할 여유 없이 조기에 진압되었다. 3차에 걸쳐 봉기를 일으킨 제6연대 군인 280여 명은 무기를 들고 입산하여 경북유격대에 합세했다. 그들은 1949년 여름에는 대구사단을 구성하여 태백산·문수산·일원산 일대에서 활동했다(전갑생 2011). 또한, 봉기 군인들은 경북 각 군

유격대에도 핵심으로 참여했다. 제1차 봉기를 일으킨 곽종진은 달성군 당과 결합하여 달성군 유격대를 결성했다. 그는 달성 중석광산 노동자들을 봉기시켜 유격대에 합류시키기도 했다(이일재 1990, 387).

1949년 6월에는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하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고 8월과 9월에는 관공서, 경찰서, 군사령부 등을 정면 공격하는 ‘9월 대공세’가 전개되었다. 경북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경찰서 습격, 다리 끊기, 열차 탈취 등의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1949년 8월 29일 달성군 유격대가 화원지서 뒷산에 올라 썰과 리를 치고 봉화를 올려 달성경찰서 병력을 유인하고 습격하여 총기를 다수 획득한 ‘화원 사건’이 일어났고(이일재 1990, 387), 달성군 유격대가 중석 광산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달성군 서○○ 구술). 1949년 10월 2일에는 경북도당 유격대가 세 갈래로 나뉘 동부 블록은 경주경찰서를, 북부 블록은 안동경찰서와 형무소를, 남부 블록은 하양지서를 습격하는 투쟁이 있었다(이일재 1990, 388). 이처럼 유격대의 무장투쟁은 1949년 7, 8월 아성 공격과 9월 총공세 시기에 정점에 올랐으나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전개된 군경의 동계 토벌작전으로 세력이 위축되었고, 도시나 마을의 지하활동 조직들도 파괴되었다.

2) 1949년 대구지역의 상황

1948년에는 부분적으로 전개되던 무장투쟁은 1949년부터는 남로당의 주요한 투쟁전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무렵에도 남로당 대구시당의

활동은 계속되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관련자 검거 기사와 몇몇 구술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48년 12월 말 제6연대 도주 군인 박덕균, 남로당 대구시당 무기획득 총책임자, 남로당 무기제조과장 등이 12월 19일 대구 시내에서 예정된 군경 친목 합동행진을 틈타 무장봉기를 계획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대구시보 1948/12/23; 민국일보 1948/12/29). 그리고 대구 계성중학교 교원 세포원 6명이 구속되었다(대구시보 1948/12/21). 1949년 2월 22일에는 삼일절 기념일을 앞두고 경찰이 대구부내 각 학교를 포위하고 수업 중이던 학생 100여 명을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중학교 교원 21명과 학생 30여 명, 학교 소사 3명 등 50여 명이 검거되었다(대구시보 1949/02/23).

1949년 9월에는 9월 공세기를 맞아 당국의 검거가 잦았다. 9월 초에는 대구에서 전평 관련자 30여 명이 검거되었다(조선중앙일보 1949/09/08). 9월 중순에는 경북 전평 서기과 책임자와 경북약품회사, 남전, 문경탄광, 달성 광산 등 여러 기업체에서 활동하던 18명이 검거되었다(영남일보 1949/09/17). 같은 시기에 대구 철도경찰대 사찰계가 대구 남로당 선전부와 문화부 계통 관련자 60여 명을 체포했다. 여기에는 각급 학교 교원과 금융조합·은행·관공서 등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 1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서울신문 1949/09/13). 11월에는 유격대 무기제조책 검거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0월 중순 경북중학교 학생 중 과학 성적이 우수한 자가 화약을 제조 중이라는 단서를 따라가다가 대구 시내 수습 개

소에서 민주군 제3사령부 무기제조 참모 겸 경북도당 특수무기제조부 책임자 외 15명을 검거했다(서울신문 1949/11/07). 11월 18일에는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검찰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법원에 근무하던 전 공(電工)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방화하여 일어난 것이 드러났으며, 방화를 한 3명은 구속되어 몇 달 뒤 사형이 구형되었다(영남일보 1949/11/20; 동아일보 1949/11/28; 자유신문 1950/01/18). 12월에는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활동하던 남로당 직장 세포원 25명이 구속되었다. 그들은 1948년 2월 중순부터 세포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특히 은행에 근무하는 세포원들은 자금 절취를 계획하고, 관공서 세포원들은 기밀을 탐지하고 중요 시설을 조사하여 약도를 작성해 남로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영남일보 1949/12/11).

이상의 기사들은 공안 당국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당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유추해보면 1949년에도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산하에 직장·공장 세포와 학교 단위의 세포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었고, 이 비합법 세포들을 중심으로 유격대의 무장투쟁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조직 세포보다는 관공서, 은행, 무기 제조 등 특수 세포의 활동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1949년 무장투쟁기의 당 활동체계

무장투쟁이 당 활동의 중심이 됨에 따라 남로당 경북도당의 체계도

농촌의 유격대 활동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일재에 의하면, 남로당 경북도당은 1948년 8월까지의 대구지역의 원로 활동가인 이선장이 입산하지 않고 지하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도당위원장은 1949년 말까지 중앙당에서 파견된 최운봉이 맡았다. 1949년 말에는 도당이 대구시에 발붙이기 힘들어 팔공산으로 입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형식상 도당이 산에 있을 수 없다 하여 입산한 도당 지도부는 격을 낮춰 '경북도당 팔공산 대행기관'(팔대)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이 무렵의 위원장은 배철이 맡았다. 그 역시 중앙당에서 경북도당 오르그로 파견되어온 사람인데, 입산한 상태에서 도당위원장을 맡아 1950년까지 활동했다. 한편, 경북도당의 체계는 1948년 2월경에는 당위원장 밑에 조직책과 2명의 부조직책이 있고 그 밑에 군마다 오르그가 한 명씩 배치되어 군을 지도했다. 이는 1948년 6~7월 사이에는 3개 군을 하나로 묶어 블록책을 한 명 두고 그에게 도당에서 오르그를 보내 지도하는 블록책 구조로 바뀌었다. 1949년에 무장투쟁이 본격화되자 경북도당 체계는 경북 전역을 북부, 동부, 남부의 세 블록으로 나누어 각각에 블록책을 두고 1개 블록이 몇 개의 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각 블록에는 도당 소속의 정치위원(코미사르)이 내려갔으며, 제1정치위원은 유격대내 정치공작을 총괄하고, 제2정치위원은 대적사업을 담당했으며, 제3정치위원은 대민사업을 담당했다. 입산한 당조직은 당선과 군사선(또는 블록선)으로 나뉘어 있어 군사선은 각 군 유격대의 연합작전 등을 통괄했다(이일재 1990, 384-389).

군당 유격대의 구성원은 '산화(山化)한 유격대'와 '들군'으로 구분되기

도 했다. ‘산화한 유격대’는 당의 명령에 따라 입산한 유격대원을 말한다. 그들은 군당별로 30여 명 정도가 있었고, 산중에서 생활했으며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들군’은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군을 말한다. 그들은 입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연고지에 머물면서 ‘산화한 유격대’와 지역민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으며 낮에는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유격대와 결합하여 활동했다(이일재 1990, 387). 그런데 경북 영천지역의 사례를 보면, 좌익 세가 강했던 마을에서는 들군의 수가 많았고 청년층 가운데 입산자와 재가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동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유격대 작전에 동원되어 무장투쟁의 주요 구성원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동원된 뒤에는 군경에게 한꺼번에 끌려가 집단 학살당했다(김상숙 2014, 125). 한국전쟁 전에 전개된 유격대의 무장투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정권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한적인 투쟁이며, 마을과 도시에서 당 사업을 병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김득중 2001, 324).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산지가 협소한 한국에서 유격대 활동이 대중운동으로 연결되려면 들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들군들은 사실상 유격대의 존립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자주적인 조직단위가 되지 못하고 입산한 유격대의 동원단위로 활동하다가 집단학살되면서 대중운동은 궤멸하고 유격대도 점차 고립되었다. 이것은 당시 남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1946년 10월 항쟁 이후부터 3년 동안 군경의 토벌과 야산대·유격대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던 대구 인근의 경북 농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한편 이 무렵 대구시당의 조직체계와 활동방식은 1949년 11월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남로당 대구시당 당원은 150여 명 정도였다. 그리고 당 간부로는 남로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천철, 부위원장 양유홍(32세) 등이 있었고 동서남북 4개 지구당책과 직장세포책이 있었다.¹⁰⁾ 그들은 당원들을 지도 교양하는 동시에 파괴당하고 연락이 끊긴 경북도당을 복구시키기 위해 투쟁했다. 중요한 투쟁 과업으로서 ① 조직의 유대 강화, ② 비합법 태세 강화, ③ 선전 과업의 강화 등을 내걸었다. 한편 그들은 대구시 민주군 투쟁의 강화, 연락, 식량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10월에 72명이 검거되어 이 중 38명이 11월에 구속되었다(영남일보 1949/11/29). 이 기사를 보면, 1949년의 남로당 대구시당은 동서남북 4개 지구당과 직장 세포책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46년 10월 항쟁 시기의 조직체계와 같으나 청년부, 학생부 등 주요 부서가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10월 항쟁 시기에는 당 간부진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지역 명망가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으나, 1949년에는 해방 직후

10) 이 기사에 실린 시당 부위원장 이하 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서기실장 정달용(34세), 시당 블록책 최오득(39세), 시당 조직책 손달익(28세), 시당 부조직책 안정환(29세), 문서과책 조태현(35세), 출판과책 최현직(28세), 복구당책 김진원(23세), 복구당 조직책 문종록(33세), 복구당 지도과책 전기락(35세), 동구당 조직책 이윤식(28세), 중구당책 김용식(29세), 남구당책 김종하(45세), 지역(職域) 민보 세포책 이성휘(24세), 영일 세포책 양유석(21세), 남경 세포책 마경초(31세), 경북인쇄소 세포책 강태석(21세), 남건 세포책 신개동(24세), 태양방직 세포책 이성로(28세).

에 활동했던 간부들은 완전히 물러나고 젊고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간부직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의 주 내용도 새로운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사업보다는 입산한 경북도당과의 연락을 복구하는 사업과 식량 보급, 주요 시설 조사 등 유격대 활동을 보조하고 테러행위를 준비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4. 통제와 학살

1) 정부수립기 민간인 학살

1949년에 유격대와 군경의 접전이 일어나면서, 대구시 외곽지에서는 남로당 가입자나 산간지역 주민들이 다수 살해되었다. 이 시기 학살의 주요 목적은 유격대의 보급기지를 차단하고 유격대와 대중운동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있으므로, ‘들군’의 역할을 하던 마을 주민들이 주로 학살되었다. 제4대 국회 보고서에는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지역 피살자 5,082명의 기록이 있다. 이 중 1946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피살자는 1,664명으로 33%에 달하며, 주로 1949년 하반기 군경토벌작전이 대대적으로 있던 시기에 태백산맥과 연결되는 산지가 있는 경북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학살되었다(김상숙 2011b, 32).¹¹⁾

11) 제4대 국회의 조사는 신고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유족들이 신고하면 피해를 볼까

이 시기에는 운동의 중심지가 경북의 산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했으므로 도시 지역인 대구에는 경북의 군 지역만큼 피살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 거주자들이 시 외곽지로 끌려가 경찰과 호림부대 등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례는 신문기사와 제4대 국회 보고서, 진실 화해위 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제4대 국회 보고서에는 피살자들의 직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구·달성지역 피살자 중에는 농민, 교원, 학생, 노동자, 상인, 임산업자, 광산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4대 국회 1960c).

주요 학살지로는 달성군 가창면 상원동 달성 중석광산을 들 수 있다. 제4대 국회 「최종보고서」에는 “1949년 3월 18일부터 1950년 7월 중순까지 호림부대와 소속 불명의 군복 무장병이 가창면 상원동 중석광산에서 140명을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제4대 국회 1960a). 달성 중석광산 학살사건은 현장 생존자의 증언도 있다. 가창면 주민 전○○(1927)는 1949년 호림부대원에게 끌려가 달성 중석광산 화약 창고에 1주일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 그는 화약 창고에 함께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밤마다 호림부대원들에게 끌려나가 창고 근처에서 총살당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중에는 대구 전매청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 김상숙은 진실화해위 현지조사 자료를 근거로 실제 희생자 수는 최소로 잡아도 제4대 국회에 신고된 피살자 수의 3배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상숙 2011b, 13).

화약 창고 크기가 약 50평. 갇힌 사람은 15명에서 20명 정도였는데 수시로 불러 나가고 실어다 들고 해서 (숫자가) 일정하지 않았어. 전매청 직원 10여 명이 끌려왔고 철도청 사람도 잡혀 와 맞는 걸 봤고. 밤에 그것(호림부대원)들은 총 메고 들어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불러내지. 개귀신도 아 니고. 그리고 (불러낸 사람에게) 손을 땅바닥에 대라고 한 뒤 손에 방아쇠를 탁 땡기뻐다. 그러면 손에 피가 줄줄 나오는데 그 구멍에 총을 푹 꿰어서 사 람을 끌고 나갔어. 셋 들어오면 셋 꿰어서 나가고 둘 들어오면 둘 꿰어서 나가 고. 불러 나간 뒤에 5분, 10분 지나면 총소리가 낮아(달성군 전○○ 구술).

또한, 당시 달성 중석광산 근무자 서○○의 증언에 따르면, 1949년 여기에 주둔하던 호림부대원들은 광산 옆의 옥산 전씨 제실(祭室)을 사 무실 겸 취조실로 사용했고 광산의 화약 창고를 구금 장소로 사용하면 서 민간인을 학살했다. 또한, 경찰 주둔소가 따로 있어 남대구서에서 파 견된 경찰이 15명 정도 주둔하면서 호림부대원들의 활동을 보조했다(서○○ 구술).¹²⁾

또 다른 민간인 학살지로 자주 거론되는 곳은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학산 일대이다. 이곳은 현재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상인동, 송현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월배 본리골’, ‘본리동 부채골’ 등 다양한 이

12) 이곳은 한국전쟁 직후에도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장소로 사용되었 다. 광산 근무자 서○○은 한국전쟁 직후 광산에 헌병대가 주둔했고, 자신은 헌병 대와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할 때 시신 처리에 동원되었다고 하면서, 트럭 여러 대 가 열 차례 정도 민간인을 싣고 와서 학살했다고 증언했다(달성군 서○○ 구술).

름으로 불렸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1949년 8월 29일 '화원 사건' 발생 직후 마을 구장 신재식 등 달성군 주민 20여 명이 화원지사로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화원면 본리동 부채골에서 사살된 일이 있었다(진실화해위 2010a, 123).¹³⁾ 1960년 신문기사에도 1949년부터 1950년 6·25 후까지 본리동 과수원 서남계곡에서, 그리고 1949년 겨울 상인동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어서 대구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이 유해를 발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영남일보 1960/08/23).

2) 국민보도연맹 조직과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이승만 정권은 단독정부 수립 후 민간인 학살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일민주의 등 반공 선전을 강화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 공포한 후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이주하는 주민에게 유숙계 제도를 시행하고, 학도호국단을 편성하는 한편, 민보단과 대한청년단을 편성하여 각계각층을 통제하여 대중들의 신체를 직접 구속했다(김득중 2001, 327). 또한, 좌익 교원과 학생의 통제를 위해 대구에서는 칠성동 어망공장에 학생관계수용소(학도훈련소)를 개소했다(영남일보 1949/06/24).¹⁴⁾

13) 제4대 국회 자료에는 달성군 신재식 등 3명의 신고서에 1949년 여름 부채골에서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달성군 이기훈 등 6명의 신고서에는 “1949년 8월 29일 화원면 주민 여러 명이 지서에서 경비를 간 후 화원면 본리동 하 음곡에서 폭도라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제4대 국회 1960b).

14)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퇴학생에 대한 훈련소 설치 계획(대구시보 1949/

이 어망공장은 당시 경상북도 경찰청 특경대장을 했던 이강학이 운영하던 곳이다(경찰 노○○ 구술).

1949년 4월에는 ‘좌익 전향자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다.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이하 경북보련)은 1949년 11월 6일에 대구공회당에서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선포식을 가지면서 결성되었다. 경북보련의 간사장은 백기호, 부간사장은 배승환, 총무부장과 보도부장은 마영, 조직부장은 양재소, 선전부장 백기만이였다(남선경제신문 1949/11/03, 1949/11/07). 결성 당시 경북보련은 임시사무소를 대구경찰서 3층에 두고 450명의 자수자를 포섭했는데, 그중에는 남녀 중학생 약 8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영남일보 1949/11/06). 11월 23일에는 대구에서 총 1,554명이 가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맹자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 중 절반은 학생이었고, 민청 단원이 약 20%, 남로당원이 약 17%, 여맹 단원이 약 8%였다. 보련 가맹자는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나, 6·25 직후엔 적어도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매일신문 2006/09/11).

1950년 3월 10일에는 경북보련 간사장 백기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백기호는 남로당

02/08).” “경상북도, 군관연석회의에서 귀순한 좌익학생을 위한 학생교화원 설치 결정(영남일보 1949/05/26).” “학교 재학 중의 청소년 중 불온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적극 선도하기 위하여 경북도 학무당국에서는 학도훈련소 발족에 맹활동 중 이던 바 훈련소 장소로 결정된 칠성동 어망공장 내부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감으로써 오는 7월 1일경에 개소식을 거행하고 훈련 사무를 시작키로 되었다 한다(영남일보 1949/06/24).”

의 지령을 받고 보련 간사장에 취임, 야산유대를 자기 주택 내에 은폐, 치료 혹은 야산유대에 의약품을 구입 제공하고, 보련을 자당 세력의 확대 강화 기관으로 오인”(영남일보 1950/03/12)했다고 한다.¹⁵⁾ 경산 반야월에 있던 백기호의 과수원은 한국전쟁 전 유격대원들이 입산 루트로 활용하거나,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이 학살을 피해 은신처로 활용했다는 증언이 있다(이일재 1990, 385; 매일신문 2006/09/11). 한편, 국민보도연맹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던 영천의 몇몇 마을에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청년들이 지서 인근에 함께 집단 거주하며 활동하거나(영천항보○구술), 회의를 할 때 적기가를 부르면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있다(칠곡 이○○ 구술). 이와 같은 기사와 증언을 보면, 국민보도연맹 가입 후에도 남로당 활동을 계속한 간부나 맹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경산 코발트광산, 대구 가창골, 달성 중석광산 등지에서 학살되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소 1,000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된다(진실화해위 2009a, 617). 제4대 국회 보고서에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된 대구지역 피살자 411명의 명단이 있는데,

15) 백기호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을 했던 활동가이다. 1926년 6월경 '제2차 조공 검거사건' 때 검거되어 1927년 4월 면소처분을 받았다(강만길·성대경 1996). 그는 해방 직후 인민당에서 활동하다가 3당합당 후 남로당에 합류했으며(유한중·김광식 1989), 10월 항쟁 관련으로 구속된 뒤 1947년 7월에 석방되어 남로당 재정을 후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소설가 백신애의 오빠이기도 하다.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살자로 추정된다(김상숙 2011b, 15).

5. 결론

이 글에서는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대구지역 진보적 사회운동의 변화 양상과 이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1946년 10월 항쟁을 전후하여 조공은 대중정당 결성을 표방하며 남로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결성하고 민전조직을 정비했다. 그러나 전위주의 활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당국의 탄압도 심해 광범한 계층계급의 대중을 조직으로 포용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도 남로당과 민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높았다. 부문별로는 철도노조 등 노동운동 부문은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역량이 약화하였고 민주학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학생운동과 도시 인근 지역의 농민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렇게 성장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1948년에는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하여 2·7 구국투쟁과 5·10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분단체제로 치닫는 상황을 저지하지 못했다.

정부 수립 후에는 여순항쟁의 영향으로 대구 6연대 사건이 일어난 뒤 경북 일대 산지에서 유격대의 무장투쟁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산하에 직장·공장 세포와 학교 단위의 세포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었으나 대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

고 비합법 세포들이 유격대의 무장투쟁을 보조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농촌지역 유격대의 구성원은 입산하여 '산화(山化)한 유격대'와 자신의 연고지에 머물면서 입산자와 지역민 사이에 연결 고리 역할을 하던 '들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9년, 군경은 유격대와 대중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들군'의 역할을 하던 마을 주민들을 다수 학살했다. '들군'들이 자주적 조직단위가 되지 못하고 유격대의 동원단위로 활동하다가 학살되면서 유격대는 점차 고립되었고,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정권의 물리력에 의해 꺾일하였다.

학계 연구에는 1946년 10월 항쟁이 좌편향의 무분별한 투쟁이었고, 진보세력에 커다란 피해를 줘 이후의 남한 사회운동이 약화하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1946년 10월 항쟁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진행된 사회운동 양상을 보면, 항쟁 결과 사회운동이 무조건 약화된 것만은 아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는 미군정 및 보수 세력과의 대결이 전면화되고 전선이 분명해지면서 주요 핵심 세력은 탄압당했지만,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서는 대중운동이 더 성장한 곳도 있었다. 정부 수립 전까지 활발했던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정부 수립 후 퇴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엄청난 물리적 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을 자주적 단위로 조직하지 못한 남로당과 유격대 무장투쟁의 활동 방식의 문제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술자 인적사항

연번	이름	출생 연도	당시 거주지 (당시 지명)	사건 당시 경력	구술일자
1	강창덕	1927	대구	대구상업학교 학생(본문 각주 1 참고)	2013/09/28
2	김○○	1923	경북 영천군	영천 주민. 1949년 8월 입산. 1950년 3월 체포.	2011/11/20
3	노○○	1919	대구	대한청년단 감찰부장. 1950년 이후 경찰 근무.	2011/11/10
4	서○○	1932	경북 달성군	1949년~1953년 달성 중석광산 직원.	2015/07/04
5	시○○	1930	대구	1947~1948년 민애청 구성원. 1948년 12월 구속.	2011/11/09
6	유병화	1929	대구	대구철도노조 조직부장(본문 각주2 참고)	2013/09/05
7	이○○	1928	대구	1946~1947년 서북청년단원.	2011/11/13
8	이○○	1932	경북 칠곡군	1946년 10월 항쟁 목격.	2013/07/19
9	이일재	1923	경북	화학노조 대구지부 서기 등(본문 각주 3 참고)	2010/11/10
10	전○○	1927	경북 달성군	1949년 달성 중석광산 학살사건 생존자.	2015/07/30
11	조○○	1926	경북 영천군	1948년 2·7 투쟁 참가 후 제6연대 입대.	2011/11/20
12	한○○	1929	서울	1948년 2·7투쟁 시 민주학련 구성원.	2015/10/31
13	황보○	1934	경북 영천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	2011/11/21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편.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대비정규전사』. 국방부.
- 김득중. 2001. “남조선노동당의 조직활동과 대중운동.” 『진보평론』 2001년 6월호. 307-329.

- 김상숙. 2014. “1948~1949년 지역 내전과 마을 청년들의 경험: 경북 영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1호. 117-150.
- _____. 2011a.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사건.” 『기억과 전망』 제25호. 114-153.
- _____. 2011b.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 『대구사학』 제102집. 87-121.
- 김일수. 2001.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대구지역 정치세력의 대응.” 『사립』 16호. 75-116
- 김현식·정선태 편저. 2011. 『빠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a. 『대구시사 1권(통사)』.
- _____. 1995b. 『대구시사 2권(정치·행정)』.
- _____. 1995c. 『대구시사 3권(산업·경제)』.
- 류상영. 1989. “8.15 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 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 박명림. 1995. “한국의 국가형성, 1945~48: 미시적 접근과 해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97-137.
-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심지연. 1991. 『대구 10월 항쟁 연구』. 청계연구소.
- 안소영. 1993. “해방 직후 경북지역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 (영남편)』. 여강.
- 영남일보사. 1947. 『경북총감』.
- 유한중·김광식. 1989. “한국현대사의 증언 - 혁신계 변혁·통일운동의 맥.” 『역사비평』 통권7호.
- 이영도. 2005. “1945~1948년 대구지역 우익세력의 정치조직 결성과 국가건설운동.” 『대구사학』 제79집. 113-140.

- 이완범. 2008.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단계론.” 『정신문화연구』 31권 5~40.
- 이일재. 2009. 『노동자 평의회와 공산주의 길』. 빛나는 전망.
- _____. 1990. “해방 직후 대구지방의 조공·전평활동과 ‘야산대.’” 『역사비평』 통권 11호. 359-391.
- 정영진. 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 정해구. 1988. 『10월 인민항쟁연구』. 열음사.
- 전갑생. 2011. “3인3색으로 본 6·25전쟁: 북 노획문서로 본 6·25전쟁.” 『민족21』 123호.
- 제4대 국회. 1960a. “최종보고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_____. 1960b. “6-16 달성군 보고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_____. 1960c. “6-22, 6-23 대구시 보고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조선은행 조사부. 1949. 『경제연감』.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010a.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 _____. 2010b.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7권』.
- _____. 2009a.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 _____. 2009b.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 최혜월. 1988. “미군정기 국내안 반대 운동의 성격.” 『역사비평』 계간 창간호. 6-30.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 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 1987. 『내 고장의 대공투쟁사』. 한국반공연맹 경상북도지부.

- 허은. 1994. “경상북도 지역 지방인민위원회의 역사적 배경과 활동.” 『역사연구』 3호. 147-186.
- 허종. 2005. “미군정기 후반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조직과 국가건설운동.” 『대구사학』 제79집. 141-175.
- _____. 2004.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 세력의 국가 건설 운동과 ‘10월 인민항쟁.’” 『대구사학』 제75집. 149-187.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39. 1948/05/20.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Taegu Riots, chart of organization.”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한림대학교 출판부.

신문기사

『국제신문』. 『남선경제신문』. 『대구시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민국일보』. 『서울신문』. 『영남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인민보』. 『조선중앙일보』 등(지면 관계상 보도 일자와 기사 제목은 생략함).

Abstract

Progressive Social Movement and Civilian Massacre in Daegu from 1947 to 1949

Kim, Sang-Sook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looks into the development of a progressive social movement and a civilian massacre in Daegu from 1947 to 1949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rogressive social movement in Daegu which was carried o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up to the Korean War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when many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Chosun Communist Party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were formed post to the liberation. Public disputes also sprawled and were developed into the 1946 October uprising. The second period was when there were several disputes: a dispute to resume the US-USSR Joint Commission in 1947 by students, youths, laborers and farmers after the Namchosun Labor Party was formed by integrating three parties at the end of 1946; and a dispute opposing the separate el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 Korea in 1948. The third period was when there occurred the rebellion of the Regiment No.6 of Daegu due to the Yeosu-Suncheon Rebellion, also known as the Yeo-Sun incident after the launch of separate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an armed struggle between the Yasandae, a guerilla that emerged since the 1946 October uprising in Yeongcheon, and guerilla fighters in a

mountain area near Daegu. This article looks into the second and the third periods, touching upon changes in the progressive social movement in Daegu after the 1946 October uprising. It also covers how these incidents lead to the pre-Korean War civilian massacre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uidance of Alliance.

■ **Keyword:** Daegu, 1946 October Uprising, Namchosun Labor Party, The Rebellion of the Regiment No.6 of Daegu, Guerilla, Civilian Massacre,

투고 : 2016/3/31 심사 : 2016/4/20 확정 : 2016/5/13